

민주 최고위원 후보자들, 전북 방문 잇따라

윤영찬 “당 쇄신” · 서영교 “균형발전” · 장경태 “호남정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서영교 후보들이 잇따라 전북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먼저, 윤영찬 의원(경기 성남시중원구)은 도의회 기자회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의 정신과 가치 부분이 많이 상실했고 원칙적인 당의 운영이 많이 훼손됐으며, 그로 인해 당원들이 자부심을 가지지 못하고 그러한 부분이 민주당 강세지역의 낮은 투표율로 나타나고 있다”고 민주당의 쇄신을 주장했다.

또한, “강한 정당은 이기는 정당이다”며 “지난 지방선거의 패배가 대선 패배의 성찰과 원인분석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잘못을 꾸짖었다.

특히, 호남 경선이 차지하는 의미에 대해 “민주당에 호남이 없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고 민주당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호남에서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며 “당이 어려워올수록 호남의 민심과 마음이 이번 경선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호남의 역할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윤영찬 의원은 “현재 6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호남지역에서 반전을 보여준다면 수도권에서 역전을 노려볼 수 있다”며 호남의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그는 “전북의 인구가 180만 아래로 떨어진 상황에서 가장 먼저 지방 소멸이 전북에서 나타나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광역 시조차 없는 도시인 전북에 인권적 측면에서라도 광역이나 지방자치 특

례시가 생겨나야 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어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도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선의원인 자신이 최고위원이 되어 대한민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이다인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춘추관장, 문재인 대통령 시절 원내 수석부대표를 지낸 서영교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가장 많은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전북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의제로 만들고 법안을 만들겠다”고 전북도민들에게 어필했다.

특히, 서 의원은 전북의 발전을 위해 3가지 공약을 준비해왔다. △지방 소멸대응기금 확대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전북 △새내민급 사업 속도 가속화를 발표하며 “전북도에 2058억원의 지방소멸기금이 지급된다는 발표가 있었다”며 “자신이 지난 10월 행안위에서 앞으로 10년간 총 10조원의 기금을 추진했기에 나온 성과이다”며 이제는 기재위원이된 자신이 전북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더 확대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대기업과 알짜기업들이 전북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30년 넘게 지지부진한 새내민사업을 예산과 행정에 있어 자신이 제대로 뒷받침 하겠다”며 전북의 오랜 숙원사업들에 대한 자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윤영찬 의원(사진 왼쪽부터), 서영교 의원, 장경태 의원이 17일 전북도의회를 찾아 도민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특권 타파와 김대중의 혁신의 정치 특히, 윤석열 정부의 반 민주적인 행태에 대해 입법을 통해 막아낼 것이며, 공공기관 민영화의 움직임 또한 자신이 막아내겠다”며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또, 전북의 현안에 관해서는 “호남의 일지리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며 “전북의 그린에너지를 발전시켜 전주, 익산 정읍 등 호남의 일자리 성공을 영남까지 전파하여 국가 민영발전의 모델로 만들겠다”고 어필했다.

장경태 의원은 “혁신은 당원과 소통하고 인재를 육성하고 수권하는 것이다”며 “최고위원이 되면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민주당의 입법 예산 등에 당원의 결정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호남 출신 혁신위원장 출신 장경태가 강력하고 유능한 야당을 만들어 전북도민에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자신의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오는 20일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열리게 되는 전북 순회경선은 2명의 당 대표 후보와 8명의 최고위원 후보가 합동연설에 나서며, 17일 주주의 국가를 검찰 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호남 정신은 굳건할로 짓밟아도 사라지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다시 호남정신으로 전면 무장하고 개혁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동작구)은 “다시 호남정신으로 민주당을 혁신하겠다”며 유일한 30대 최고위원 후보인 자신이 호남정신을 실현하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호남의 지지를 요구했다.

먼저,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의 국가를 검찰 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호남 정신은 굳건할로 짓밟아도 사라지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다시 호남정신으로 전면 무장하고 개혁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최고위원이 되면 “호남을 대표하는 최고위원이 되어 기

전북지역 현안과 관련

윤영찬 “인권 측면서라도 전북에 광역시 등 생겨야”

서영교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등 3가지 공약 준비”

장경태 “그린에너지 발전시켜 일자리 성공 전파”

의 포부를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전북에서 지지를 해주고 힘을 모아준다면 자신이 전북의 현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힘을

쓰겠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곳까지 해보겠다”며 전북도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기자회견을 한 장경태 의원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연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 ‘기소시 직무 정지’ 당헌 유지

당무위, 정치탄압 판단시 달리 결정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의결된 당헌 제80조 개정안을 부결시키고 ‘기소시 직무 정지’ 당헌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정치탄압이 인정될 경우 당무위원회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 1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헌 80조 3항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며 “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당무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3항 수정안을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기존 당헌 80조 3항에 따르면 정치탄압에 대한 판단은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맡는다. 전준위에서는 지난 16일 판단 권한을 윤리심판원이 아닌 최고

위원회에서 맡는 안을 내놓았지만 비대위에서 이를 수정 의결한 것이다.

신 대변인은 “어제(16일) 전준위와 의원총회를 통해 여러 의견에 대한 토론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며 “그런 면에서 오늘(17일) 비대위원회의 결을 바탕으로 해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절충안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80조 1항에 대해 과거 우리 당의 혁신위원회에서 만들었던 부정부패 연루 정치인에 대한 내용을 존중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정치보복 탄압으로 인해 기소당하는 당직자에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당무위에서 부당한 기소나 판결에 대해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오늘 절충안을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정치탄압 판단 권한을 당무위원회에 둔 이유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사이의 고민이 있었고 내부

에서 치열하게 고민했다”며 “최고위원 회보다는 좀 더 확장된 논의가에서 결정하는 것이 국민들이 부정부패 정치탄압 수사에 대해 결정하는 데 좀 더 공신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당원총회 계서관의 당헌 80조 개정 요구에 대한 답변이라고 이해 해주면 될 것 같다”며 “당원들이 우리 당에 여러 의견들을 온라인 플랫폼 통해 지도부에 전달해 지도부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론내는 과정이었다”고 부연했다.

한편 비대위는 당헌 112조3에 규정된 비대위 구성 조건인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모두 결위원 등 당의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과반’ 결위원으로 수정하는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번 비대위의 당헌 개정안은 오는 19일 당무위에서 인준을 받은 뒤 오는 24일 중앙위원회의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뉴스1

“尹 관저 공사 특혜 · 사적 채용 의혹 규명”

민주,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관저 공사 수수 특혜 ·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등에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오영환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인파에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 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 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요구서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지난 100일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가 하면 대통령실 이전을 꼽고 계신 것 같다”며 “그 많은 혼선과 비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을 과연 용산으로 꼭 이전해야만 했던 경위가 무엇인지 아직도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공사를 수수하는 데 있어서도

사적인 인연이 작용한 게 아니냐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대통령실 직원도 대통령과 그 부인 등의 사적인 관계가 작동해 채용된 게 아니냐는 사적 채용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근 이전된 청와대 활용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무리한 지점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 문제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국민들이 요구해왔지만 대통령실은 모르쇠로 일관한다”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모아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에 더해 기본소득당과 뜻을 함께한 무소속 의원들 (총) 179명이 모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취지를 전했다.

국정조사 요구 대상에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안보 및 재난 대책 공백 · 교통 혼잡 · 이전 비용 등 총속 검토토하고 이전 비용을 고의로 축소한 의혹 △국방부 · 합동참모본부 이전 타당성 △집무실 · 관저 공사 업체 선정 적절성 여부 및 검건외 여사진

분 있는 업체 특혜 의혹 △대통령실 직원 사적 채용 의혹이 담겼다고 오 대변인은 설명했다.

아울러 △청와대 개방 · 활용 관련 법 · 규정 위반 의혹 △북대사임종약 기구(NATO · 나토) 정상회담 당시 민간인 특혜 의혹 △홍수 등 긴급 재난 시 부실 대응 의혹 등도 포함했다.

오 대변인은 “여당이 이러한 무수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감싸기로 일관한다면 지난 정권의 불행한 사태를 되풀이할 수 있다”며 “비선 실세에 의해 국정이 농단되는 사태로 막은 해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에 흔쾌히 응함으로써 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바로잡는 계기로 삼는 것이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며 “조사시행위원회는 의석 비율대로 선임하되 위원 18인으로 구성해 출 것을 같이 요구서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뉴스1

“실효성 있는 쌀값 폭락대책 마련해야”

나인권 도의원, 정부 등에 촉구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전북도에 쌀값 안정을 위한 실효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나 의원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전국 산지 쌀값은 80kg 한 가마니에 17만2,372원으로 전년 동기(22만3,108원) 대비 22.7% 폭락했고, 7월 말 기준 전국 농협 쌀 재고량은 42만8,000t으로 전년 동월(23만7,000t) 대비 8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 의원은 “올해 본격적인 쌀 수확을 앞두고 국내 1인당 쌀소비량은 2019년 59.2kg에서 2020년 57.7kg, 2021년 56.9kg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쌀값 하락세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끝없이 추락하는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와 전라도 차원의



대책이 없다면 농민들은 쌀값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정부가 3차에 걸쳐 2021년 산 쌀 37만(전북 5.9)을 매입한데 이어 추가로 시장작리를 시행하고 쌀 공급과잉에 따른 시장작리를 신곡(新穀) 수확기에 선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급격한 쌀값 하락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도가 쌀값 폭락에 대한 세부대책으로 농민수입발전기금을 통해 운영자금이나 수매 · 저장자금을 융자로 지원하고, 전복 쌀 소비 확대를 위해 홍보관측비를 현재 우수브랜드 쌀 5개소를 선발해 지원하는 방식에서 도 전체 브랜드 쌀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김경수 기자

전주시장 선거개입 브로커 2명 재판부, 징역 1년6개월 선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주시장 예비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조달해주는 대가로 인신권을 요구한 브로커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A씨와 전 시민사회단체 대표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행위보다 이익 제를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이는 선거 운동을 빌미로 금권 선거를 지지 · 조정하는 행위를 엄단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1

손 씻기 ·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